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의 부패방지정책 방향이 우리나라의 부패방지정책에 주는 시사점*

What Does South Korea Learn from the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o Build An Anti-Corruption Strategy?

민 경 선(Min, Kyoung Sun)**

ABSTRACT

The United Nations launche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in 2016, and the Peace and Justice Strong Institution, the 16th goal of the SDGs, is related to anti-corruption strategies. The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 and the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UNGC) fight corruption with this goal. However, while many studies focus on the SDGs, it is not easy to find good research that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DGs and anti-corruption strategies. What does South Korea learn from the SDGs to build an anti-corruption strategy? To answer this research question, this paper analyzes interviews conducted by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CRC) in 2019. The ACRC interviewed managers in the UNODC and UNGC to understand anti-corruption strategies used by these organizations. This study also examines various corruption indices to measure corruption and find the trends of corruption in South Korea. The results of the interviews show tha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arget grand corruption and private-to-private corruption. Corruption indices indicate that, while petty corruption has successfully decreased, grand corruption and private-to-private corruption are still serious problems in South Korea. This research concludes that South Korea should build anti-corruption strategies to fight grand corruption and private-to-private corruption.

Key words: Grand Corruption, Private-to-Private Corruption, Anti-Corruption,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본고는 저자가 2020 한국행정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한 “UN의 지속가능 발전목표에서의 부패방지정책 방향이 우리나라의 부패방지정책에 주는 시사점에 관한 소고”와 저자가 작성한 The Oxford Handbook of South Korean Politics (forthcoming)의 book chapter인 “Corruption”에서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 및 보완을 통해 작성되었음.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 사무관, 행정학박사

I. 서론

1980년대 후반부터 널리 언급되기 시작한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주로 경제와 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Emas, 2015, p. 1).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언급되고 있으나, 널리 사용되는 정의는 1987년 United Nations(UN) 총회에서 정의한 “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라고 할 수 있다(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1987, p.43). 이 정의에서 추출할 수 있는 핵심적인 개념은 세대 간의 공평(Intergenerational Equity)이라 하겠다(Emas, 2015, p. 2).

2016년부터 UN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16번은 평화, 정의, 강한 조직(Peace, Justice, & Strong Institution)이며, UN의 반부패 전략은 16번에 포함되어 추진되고 있다.

〈표 1〉 지속가능발전목표

연번	내용
1	빈곤 종식 No Poverty
2	기아 종식 Zero Hunger
3	건강한 삶 Good Health and Well-Being
4	양질의 교육 Quality Education
5	양성평등 Gender Equality
6	물과 위생 Clean Water and Sanitation
7	에너지에 대한 접근 Affordable and Clean Energy
8	경제성장과 생산적인 고용 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
9	사회기반 시설 구축 Industry, Innovation and Infrastructure
10	불평등 완화 Reduced Inequality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정주지 조성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13	기후변화 대응 Climate Action
14	해양자원 보존 Life Below Water
15	육상 생태계 보호 Life on Land
16	평화, 정의, 강한 제도 구축 Peace and Justice Strong Institutions
17	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 Partnerships for the Goals

* 출처: United Nations (2020)

경제 및 환경 분야에서 주로 언급되는 지속가능발전은 일견 반부패와 연결고리가 약해 보인다. <표1>의 16번에서도 반부패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어 마치 반부패와 지속가능

발전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급속히 발전하게 된 부패방지 정책은 국제기구의 개도국에 대한 원조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인식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Lopez-Claros, 2014; Olken & Pande, 2012, p. 2; Smith, Pieth, & Jorge, 2007, p. 1). 부패가 경제성장의 윤활유가 아니라 걸림돌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부패방지 정책이 발전하게 되었다(Brademas & Heimann, 1998). 즉, 부패에 대한 통제 없이는 경제에 있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될 수 없으며, 환경문제 측면에서도 부패 사례가 나타나기 때문에, 부패방지를 통한 경제 및 환경문제 해결로 세대 간의 공평을 달성할 수 있다는 논리가 가능하다. Report of the 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dicators(E/CN.3/2017/2)에 명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 16번의 하위 목표 중 하나인 Target 16.5는 “Substantially reduce corruption and bribery in all their forms”로 부패방지와 지속가능발전의 관련성을 명시하고 있다(Mugellini & Villeneuve, 2019). 또한, 부패방지정책이 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제안한 National Integrity System을 중심으로 발전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16번의 Strong Institution과 부패방지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할 것이다. 즉, 부패방지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고 부패가 없는 강한 조직을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보면,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부패방지정책이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도 이러한 관계를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통해 2018년에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수립하였다. “모두를 포용하는 지속가능국가”라는 비전을 위해 사람, 지구환경,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대 전략을 수립하고, 각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17개 목표를 제시하였다(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19). 이 중 16번째 목표인 인권·정의·평화의 세부목표 중 하나는 부정부패 및 뇌물수수의 감소이다. 즉,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보더라도 부패방지와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 부패방지정책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우리나라 부패방지정책에 대한 시사점은 무엇인가? 이 연구 질문은 부패방지정책에 있어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기구들의 방향성을 이해하고 우리의 부패방지정책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고는 이에 대한 결론으로 UN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거대부패와 민간부패를 중심으로 부패방지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이러한 방향을 참고하여 정책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후 본고는 지속가능발전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국제기구 부패방지 업무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사례연구로 제시한 후, 다양한 부패와 관련된 지수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부패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을 보이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1.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내외 연구

김상욱(2009)은 전자정부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행정정보공유방식을 대장 중심에서 속성 중심으로 바뀌, 수요자에게 입체적이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메타 데이터 작성, 연계키 작성, 자료의 정확도 제고, 표준분류체계 작성 등을 필요조건으로 제시하였다.

김은경·강수돌(2015)은 사기업 구성원 313명, 공무원 266명, NGO 종사자 218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소속 집단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지속가능발전 교육은 공무원과 NGO 종사자에게는 지속가능발전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사기업 구성원에게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였다.

신건권(2010)은 2006년에 지식경제부가 발간한 지속가능 보고서(Sustainability Report)를 세 가지 측면에서 나누어 평가하였다. 보고서 개요, 전체 내용 및 정책 기술, 지표 선정, 가이드라인 적용, BSR(Best Sustainability Report) 및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대조 등의 체계 및 내용 측면과, 의사소통의 효과성, 적시성, 신뢰성, 정확성, 비교가능성 등 품질 측면, 평가기관의 신뢰성, 균형, 중요성, 완전성, 대응성 등 검증 평가 측면에서 분석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오수길(2016)은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 서울 강동구, 충청남도, 인천 남구, 서울시, 인천 부평구, 충남 아산시 등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결론에 있어서 지속가능발전을 지방자치단체의 핵심적 추진 가치로 삼아 행정 내부적으로는 수평적인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행정 외부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오수길·한순금(2018)은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가 경상남도 행정에 유용한 성과관리 지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자문회의, 설문조사, 워크숍 결과 등을 활용하여 탐색한바, 긍정적인 결론을 도출하였다. 결론으로 경상남도의 시군 종합평가지표에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우명동(2011)은 지역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의미하는 지속가능지역경제발전(Sustainable Local Economic Development)이라는 개념을 소개하면서, 지속가능지역경제발전과 정부 간 재정관계(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지역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직접적인 지원기능은 기초지자체가 하고 광역지자체 및 중앙정부는 기초지자체의 지원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 및 지원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기능 배분의 전제조건으

로 재정연방주의에서 자체재원주의로 전환과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지옥정(2019)은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의 관점에서, 영유아기에 지속 가능한 삶이라는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누리과정의 구성, 총론, 각론, 편성 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언급하였다.

Mackey, Vian, & Kohler(2018)는 보건분야의 부패를 유형화한 후,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가 보건 부패와 싸우는 지표로 어떻게 설정될 수 있는지를 예시로 보임으로써, 지속가능발전목표가 보건분야의 부패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Mugellini, G., & Villeneuve(2019)는 부패를 감시하고자 하는 UN의 지속가능 발전 지표가 UN의 2030 아젠다에서 어떤 방식으로 정의되어 왔는지, 부패관련 지속가능발전목표가 국제기구에 의해 어떻게 지원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부패관련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실제 부패를 줄이기 위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이행하려는 국가들에 대해 국제기구가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선행연구 분석

<표2>에 이상의 선행연구가 정리되어 있다. 국내문헌의 경우,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분석한 연구는 찾아볼 수 있으나, 지속가능발전과 부패방지를 연결하여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외국문헌의 경우, 지속가능발전과 부패방지를 연계하여 분석한 연구는 있으나, 주로 지속가능발전목표가 특정분야 또는 일반 영역에서 부패를 감소시키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제언에서 그치는 한계를 보여줬다. 본고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관련한 국제기구의 정책방향과 우리나라의 부패와 관련된 지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반부패 전략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의의가 있다.

〈표 2〉 선행연구 정리

연구자	연구방법	주요 내용
김상욱(2009)	사례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정보공유방식을 대장 중심에서 속성 중심으로 전환 • 메타 데이터 작성, 연계키 작성 등 필요
김은경 · 강수돌(2015)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발전 교육은 공무원 및 NGO 종사자에게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줌 • 하지만, 사기업 종사자에게는 부정적인 인식을 줌
신건권(2010)	사례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경제부의 지속가능 보고서 체계 및 내용 측면, 품질 측면, 검증 평가 측면에서 개선방안 제시
오수길(2016)	사례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발전을 지방자치단체의 핵심적 추진 가치로 삼아 행정 내부적으로 수평적인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 • 행정 외부와의 연계를 강화

오수길·한순금(2018)	사례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상남도의 시군 종합평가지표에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활용할 것을 제안
우명동(2011)	사례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직접적인 지원기능은 기초지자체에게 일임 광역지자체 및 중앙정부는 기초지자체의 지원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 및 지원 재정연방주의에서 자체재원주의로 전환 및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보 필요
지옥정(2019)	사례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유아기에 지속 가능한 삶이라는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누리과정 개선 필요
Mackey, Vian, & Kohler(2018)	사례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발전목표가 보건분야의 부패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 가능
Mugellini, G., & Villeneuve(2019)	사례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패관련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실제 부패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행하려는 국가들에 대한 국제기구의 실질적인 지원 필요

Ⅲ. 사례 연구: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의 부패방지 정책 방향

1. 개요

2019년 11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부패영향평가 모델운영 발전방안 연구”를 위한 국외 출장을 통해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UNODC)과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UN Global Compact)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를 분석하였다. UNODC는 부패, 인신매매, 테러 등 다양한 이슈를 다루고 있으며, 부패방지와 관련하여 UN 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비엔나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전 세계에 21개 현장사무소와 2개의 연락사무소를 두고 있다. Simone Monasebian 뉴욕사무소 대표와 면담을 진행하였다. UN Global Compact는 기업이 직면하는 다양한 부패 관련 이슈에 대해 위험평가, 컨설팅, 사규 개정 제언 등을 통해 기업이 부패로부터 차단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07년 유엔 뉴욕 본부에서 개최된 창설 회의를 시작으로 현재 162개국 1만여 개의 기업 회원과 1만 4천여 명의 개인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Michelle Breslauer 선임 매니저와 Christina Koulias 선임 매니저가 면담에 참여하였다.

2. UNODC와의 인터뷰 내용

UNODC는 부패문제를 인권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개발을 위한 원조가

실제 필요한 아이들에게 도달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인권침해문제를 접하면서 형성되었다. UN의 16번째 목표인 Peace and Justice Strong Institutions를 추구하는 UNODC의 반부패 임무 중 하나는 UN 반부패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의 이행 점검이다. 2003년, 2005년, 2009년에 점검을 해왔으며 국가 간에 서로 이행에 대해 점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점검에 있어서 부패에 대한 공통된 식견을 가진 전문가들이 평가에 참여함으로써 평가자에 따른 평가 편차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2년마다 General Assembly에서 반부패 관련 논의를 하고 있으며 2019년 1월에 개최하였고 다음에는 2021년 상반기에 뉴욕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17 December 2018(A/RES/73/191)에 따라 2021년 상반기에 General Assembly에서 부패방지 노력과 국제협력에 관한 논의를 할 것이다.

거대부패와 관련하여 자산회복을 위해 약 30년간 노력해왔으며, World Bank와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9년에는 2조 6천억 달러를 회복하였으며 이는 전 세계 GDP의 5%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거대부패에 대한 재판을 위해 국제 반부패 재판소(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urt)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국제사법재판소를 벤치마킹하였으며 현재 콜롬비아, 페루, 나이지리아가 공개적으로 지지하였다.

3. UN Global Compact와의 인터뷰 내용

UN Global Compact는 비즈니스 활동에서 10대 원칙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10대 원칙은 <표3>에 정리되어 있다.

<표 3> 비즈니스 활동에서의 10대 원칙

연번	내용
1(인권)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함 Business should support and respect the protection of internationally proclaimed human rights.
2(인권)	기업은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함 Make sure that they are not complicit in human rights abuses.
3(노동)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해야 함 Businesses should uphold the freedom of association and the effective recognition of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4(노동)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해야 함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forced and compulsory labour;
5(노동)	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해야 함 the effective abolition of child labour; and

6(노동)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해야 함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in respect of employment and occupation
7(환경)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함 Businesses should support a precautionary approach to environmental challenges,
8(환경)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함 undertake initiatives to promote greater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9(환경)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함 encourage the development and diffusion of environmentally friendly technologies.
10(부패)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함 Businesses should work against corruption in all its forms, including extortion and bribery.

* 출처: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2020)

10대 원칙 중 반부패와 관련하여서는 마지막 원칙 하나만 있으나, Nigeria UN Global Compact 초기 창설 멤버인 Ola Jobi Mikinwa의 말을 인용하면, “반부패가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없으면 다른 원칙들을 이행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에 UN Global Compact는 2016년부터 유엔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중 16번인 Peace, Justice, & Strong Institution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UN Global Compact는 기업 내에서의 인권과 부패방지에 주안을 두고 있으며, 부패방지 및 청렴과 시민의 권리 및 인권을 결합하여 이해하고 기업에 대해 관련된 권고를 하고 있다. 권고에 대한 이행에 있어서 강제적인 제재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자발적 순응을 위해 집단행동(Collective Action)을 요구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설득하고 있다. 집단행동이란 여러 기업이 권고를 따를 경우, 따르지 않은 기업은 청렴하지 못한 기업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따르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권고는 개도국 기업이든 선진국 기업이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지만, 개도국이 기업이 규칙을 이행하기에 더 어려운 측면을 고려하고 있다.

Action Platform for Peace, Justice and Strong Institutions 2020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Global Business Standard를 증진시키기 위해 정부, 민간, UN,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컨설팅이라 할 수 있다. 2018년까지는 Business for Peace를 목표로 분쟁지역에서의 경제활동에 치중하였으며, 한국과 관련해서는 남북경제협력과 개성공단사업 등에 참여하였다. 2019년부터는 UN 16번 목표를 위해 Baker McKenzie, L'Oréal, Nestlé 등의 후원으로 30여 개국에서 컨설팅을 위한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4. 인터뷰 결과에 대한 정리

UNODC는 글로벌 차원에서 거대부패에 대한 제재를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국제적 차원의 자산회복과 국제 반부패 재판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UN Global Compact는 Action Platform for Peace, Justice and Strong Institutions 2020을 통해 민간영역의 부패를 줄이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민간부패에 대한 국제기구 차원의 노력은 UN Global Compact뿐만 아니라 UNODC가 주도하여 각 나라에 대해 점검하고 있는 UN 반부패협약에도 나타나 있다. <표4>는 UN 반부패협약에서 민간부패와 연결된 조항을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다. 제12조는 민간영역에서의 부패도 공공영역과 동일하게 각 국가가 부패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분야임을 언급하고 있다. 제21조와 제22조는 민간영역에서 발생하는 뇌물수수 및 횡령도 각 국가가 처벌하고 부패방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현황을 종합해보면, 국제기구가 과거 개도국 부패, 생계형 부패, 공공부문 부패에 한정하였던 부패방지 전략을 거대부패와 민간부패를 포함하는 형태로 수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부패 추세를 다양한 부패 지수를 통해 거대부패와 민간부패를 고려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표 4> UN 반부패협약에서 민간부패 관련 조항

조항	내용
12조 제1항 (민간부문)	<p>각 당사국은 자국 국내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민간부문과 관련된 부패를 방지하고, 민간부문에서의 회계·감사 기준을 강화하며, 적절한 경우, 이러한 조치가 준수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예방적인 민사상, 행정상 또는 형사상의 처벌을 적절히 부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p> <p>Each State Party shall take measures, in accordance with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its domestic law, to prevent corruption involving the private sector, enhance accounting and auditing standards in the private sector and, where appropriate, provide effective, proportionate and dissuasive civil, administrative or criminal penalties for failure to comply with such measures.</p>
21조(민간부문의 뇌물수수)	<p>각 당사국은, 경제·금융 또는 상업 활동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을 고의로 범한 경우, 이를 범죄로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할 것을 검토한다.</p> <p>가. 자격을 불문하고 민간단체의 관리자 또는 근무자에게, 자신의 의무에 위반하여 작위 또는 부작위를 행하도록, 자신 또는 타인을 위한 부정한 이익을 직·간접적으로 약속·제외 또는 제공하는 행위</p> <p>나. 자격을 불문하고 민간단체의 관리자나 근무자가, 자신의 의무에 위반하여 직위 또는 부작위를 행하도록, 자신 또는 타인을 위한 부정한 이익을 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수수하는 행위</p> <p>Each State Party shall consider adopting such legislative and other measures as may be necessary to establish as criminal offences, when committed intentionally in the course of economic, financial or commercial activities:</p>

	<p>(a) The promise, offering or giving, directly or indirectly, of an undue advantage to any person who directs or works, in any capacity, for a private sector entity, for the person himself or herself or for another person, in order that he or she, in breach of his or her duties, act or refrain from acting.</p> <p>(b) The solicitation or acceptance, directly or indirectly, of an undue advantage by any person who directs or works, in any capacity, for a private sector entity, for the person himself or herself or for another person, in order that he or she, in breach of his or her duties, act or refrain from acting.</p>
22조 (민간부문의 재산 횡령)	<p>각 당사국은, 자격을 불문하고 민간단체의 관리자나 근무자가 경제·금융 또는 상업 활동 과정에서 그 지위에 의하여 위탁된 재산, 사적 자금 또는 증권, 또는 그 밖의 가치를 고의로 횡령한 경우, 이를 범죄로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할 것을 검토한다.</p> <p>Each State Party shall consider adopting such legislative and other measures as may be necessary to establish as a criminal offence, when committed intentionally in the course of economic, financial or commercial activities, embezzlement by a person who directs or works, in any capacity, in a private sector entity of any property, private funds or securities or any other thing of value entrusted to him or her by virtue of his or her position.</p>

*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2008)

IV. 부패 지수 분석

본고는 부패 인식에 대한 지수로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발간하는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를 사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부패인식지수만큼 널리 사용되는 World Bank의 세계 거버넌스 지수(World Governance Index)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매년 전체 평균값이 0에 수렴하도록 조정되고 있어 특정 국가의 부패수준의 추세를 추정하기에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패인식지수를 구성하는 하위지수 중 Gothenburg대학교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V-Dem Institute)가 발간하는 민주주의 다양성 지수(V-Dem Index)가 있다. 본고는 이 중 정권 부패(Regime Corruption)와 공공부문 부패(Public Sector Corruption)를 분석하였다. 부패인식지수는 2012년 이후 자료만 시계열 비교가 가능하나, 민주주의 다양성 지수는 그 이전의 부패수준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공하므로 분석의 의미가 있다. 본고에서는 1980년 이후 자료를 제시하였다. 부패인식지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 European Research Centre for Anti-Corruption and State-Building)에서 발표한 공공청렴지수(Index of Public Integrity)도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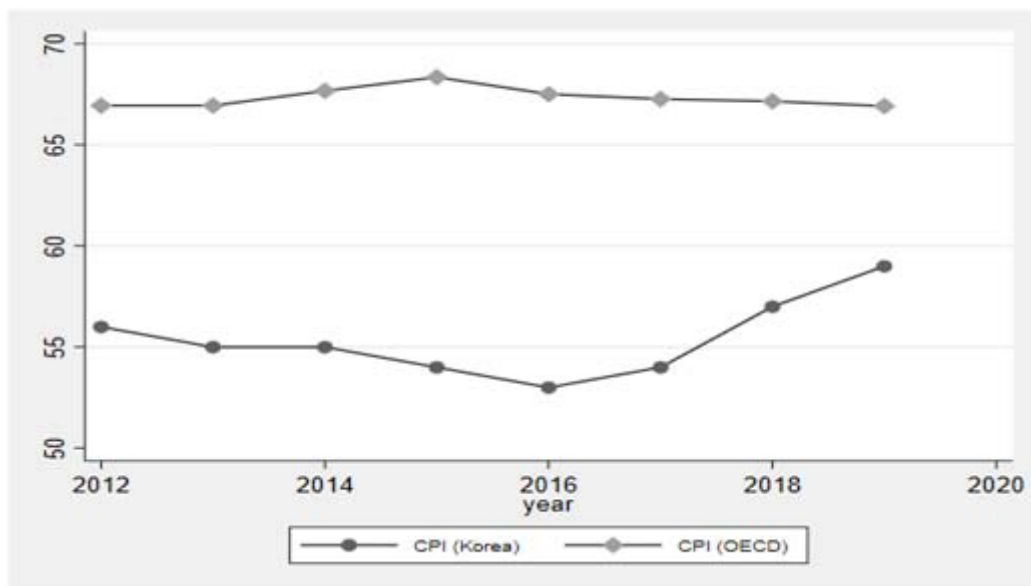
공공 영역별로 부패인식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World Justice

Project)에서 발간하는 법의 지배 지수(Rule of Law Index) 중 하위지수인 부패 부재 지수(Absence of Corruption) 결과도 제시하였다. 또한, 민간영역의 부패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부패인식지수의 하위지수 중 하나인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국제경쟁력 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를 참조하였다.

1.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국제투명성기구는 1995년부터 매년 부패인식지수를 발표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시계열 분석이 가능하도록 근거자료들을 동일 년도에서 추출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점수도 기존 10점 만점에서 100점 만점으로 변환하여 발표하고 있다. 2012년도부터 2019년까지 우리나라와 OECD 국가 평균값의 변화는 <그래프1>에 나타나 있다.

<그래프 1> 부패인식지수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59점으로 전체 180국에서는 39위에 해당하나, 36개 OECD국가 중에서는 27위로 하위권에 해당한다. 2019년도 OECD 평균 점수는 66.9로 우리나라의 점수보다 7.9점이 높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OECD 평균보다 항상 낮게 나왔다. 다만, 2016년 이후로 점수 차이가 줄어들고 있는 점은 고무적인 현상이라 하겠다.

2. 민주주의 다양성 지수(V-Dem Index)

부패인식지수는 개별지수의 합산을 통해 전반적인 인식만 제시하므로 어떤 유형의 부패 문제가 심각한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기 어렵다. 또한, 2012년 이후의 자료만 시계열 분석이 가능하다는 한계도 있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 좀 더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민주주의 다양성 지수를 활용하였다.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V-Dem Institute)에서는 해마다 21개 기관과의 협업과 180여 개국의 3천여 명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민주주의와 관련된 450여 개의 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이중 정권 부패와 공공부문 부패를 중심으로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부패수준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정권 부패와 공공부문 부패는 각 지역에 거주하는 전문가와 연구소 소속 전문가가 부패와 관련한 다양한 평가를 담은 지수들을 결합하여 산출한다(Coppedge et al., 2020, p. 28). 정권 부패 및 공공부문 부패가 측정하고자 하는 부패와 관련된 질문은 <표5>와 같다. 정권 부패는 정치인의 부패를 다루고 있어 주로 거대부패를 측정하고, 공공부문의 부패는 공공부문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거대부패와 생계형 부패를 모두 측정한다고 할 수 있다.

〈표 5〉 정권 부패 및 공공부문 부패의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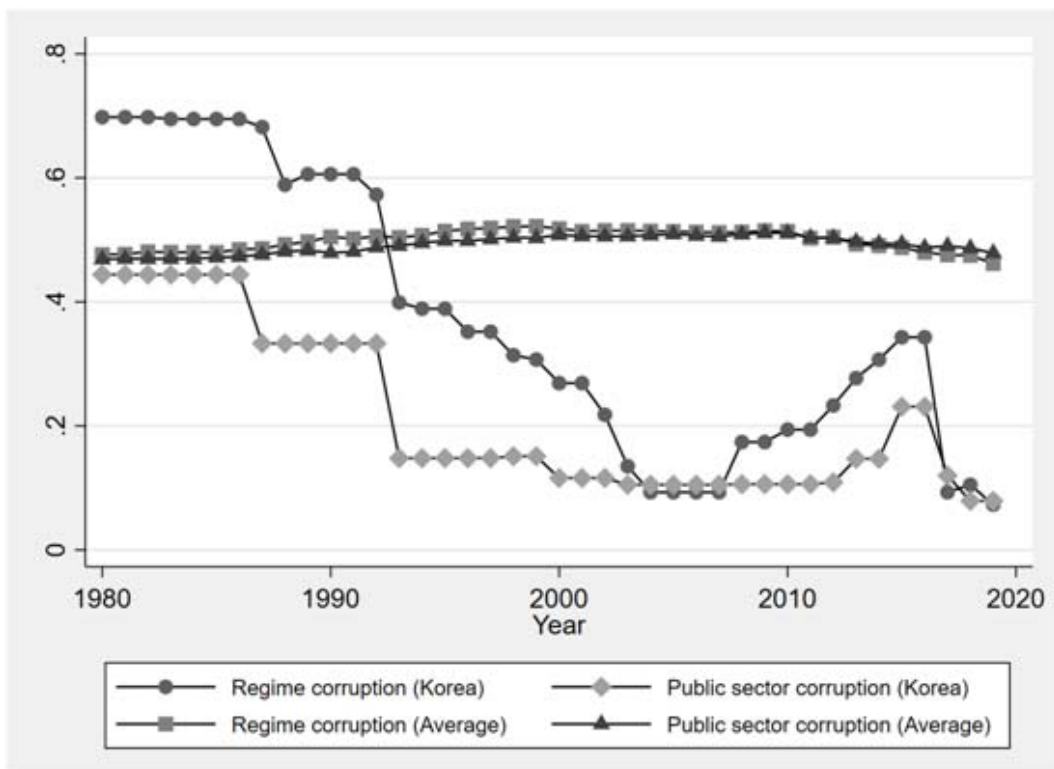
지수	질문
정권 부패	정치적 행위자들이 사적 또는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정치적 지위를 사용하는 정도 To what extent do political actors use political office for private or political gain
공공부문 부패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뇌물 또는 다른 유인책에 대해 편의를 제공하는 정도,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개인 또는 가족을 위해 얼마나 자주 횡령이나 배임 등을 자행하는 정도 To what extent do public sector employees grant favors in exchange for bribes, kickbacks, or other material inducements, and how often do they steal, embezzle, or misappropriate public funds or other state resources for personal or family use

* 출처: Coppedge et al. (2020)

<그래프2>에서는 1980년부터 2019년까지 정권 부패와 공공부문 부패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패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평에 가까운 두 선은 154개국의 정권부패와 공공부문 부패의 변화를 나타낸다. 40년간 약 0.5점 전후로 큰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상당한 변화를 보이는 두 선 중 위에 전반적으로 위에 있는 선은 우리나라의 정권 부패이며, 전반적으로 아래에 있는 선은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부패를 나타낸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의 정권 부패는 전 세계 평균에 비교하여 더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화 이후 정권 부패는 개선되어 2000년대 중반에는 최저 수준을 보여주다가 대통령 탄핵과 맞물린 2010년 중반에는 상당히 악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이후 정권교체 후 다시 최저 수준을 회복하였다. 공공부문 부패도 정권 부패와 변화 방향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정권 부패보다 낮은 수치를 보여준다. 2019년에는 우리나라의 정권 부패는 0.073, 공공부문 부패는 0.079로 나타났다. 세계 평균은 정권 부패의 경우 0.462, 공공부문 부패의 경우 0.479이다. 민주주의 다양성 지수가 보여주는 결과를 정리하면 1990년대 민주화 이후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부패수준은 감소하였으나, 정권 부패와 관련한 거대부패는 아직 위험한 부분이 있다 하겠다.

〈그래프 2〉 정권 부패 및 공공부문 부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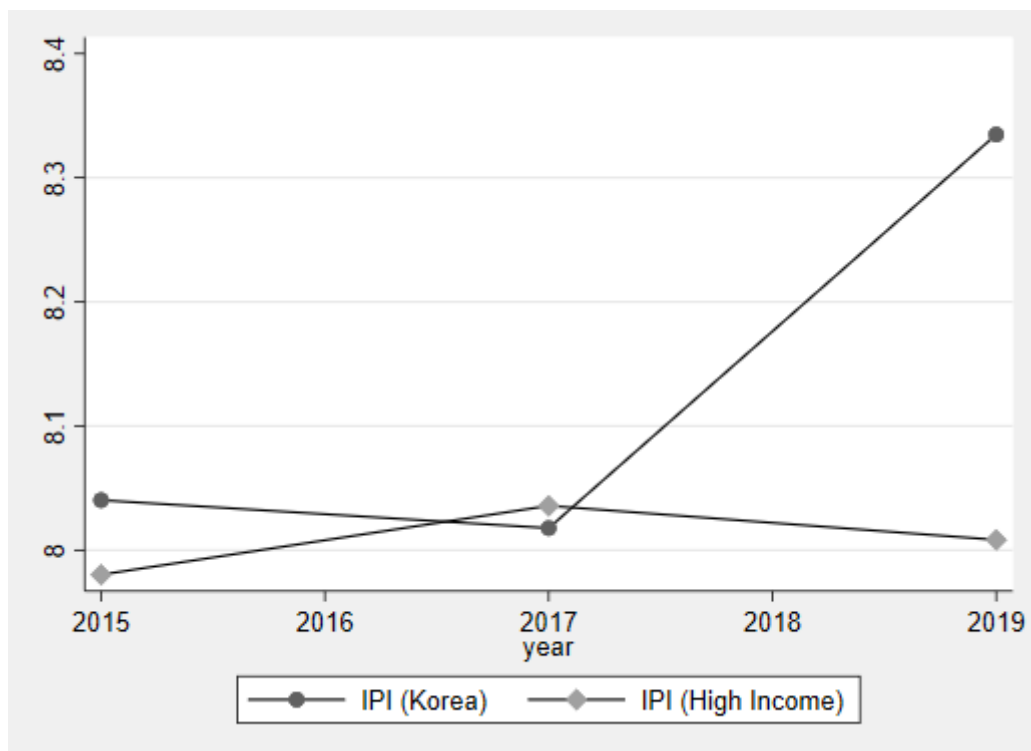
3. 공공청렴지수(Index of Public Integrity)

부패인식지수는 실제 부패수준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Kenny, 2009; Miller 2006). 이러한 측면에서 거버넌스 이론에 기반하여 인식에 대한 의존 없이 부패수준을 측정하려는 시도로 공공청렴지수가 개발되었다(Mungiu-Pippidi & Dadašov, 2016).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는 행정적 부담, 예산의 투명성, 무역 개방성을 부패와 관련된 세 가지 자원을 보고, 전자정부, 언론의 자유, 사법부의 독립성을 세 가지 제약으로 설정하여 여러 나라의 부패수준을 공공청렴지수로 측정하고 있다.

〈그래프3〉은 2015년, 2017년, 2019년에 측정된 우리나라의 공공청렴지수 결과와 40개 고

소득 국가 평균 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2019년에는 우리나라는 8.335이며 40개 고소득 국가 평균은 8.008로 우리나라가 더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2017년을 제외하고는 40개 고소득 국가 평균보다 우리나라의 점수가 높다. 공공청렴지수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부패수준은 40개 고소득 국가와 비교해볼 때 나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다른 지수와 비교해볼 때에 생계형 부패에 대한 성공적인 제재의 효과라고 할 수 있다.

〈그래프 3〉 공공청렴지수



4. 법의 지배 지수(Rule of Law Index)와 국제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

부패인식지수는 개별지수의 합산을 통해 전반적인 인식만 제시하므로 어떤 유형의 부패 문제가 어느 분야에서 심각한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또한, 민주주의 다양성 지수도 정권 부패와 공공부문의 부패로만 구분되어 구체적인 분야가 특정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에서 발간하는 법의 지배 지수 중 부패 부재 지수를 검토하고자 한다. 민간영역에서의 부패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고자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하는 국제경쟁력지수 중 기업윤리 관련 지표도 검토하고자 한다.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는 2016년부터 법의 지배 지수를 발표하고 있으며 113개국의 3대 대도시 거주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전문가 평가를 통해 지수를 산출하고 있다. 법의 지배 관련 8개 분야 44개 세부항목에 대해 지수를 발표하고 있으며, 이 중 부패 부재 지수는 행정부 부패, 사법부 부패, 경찰 및 군 부패, 입법부 부패로 구분되며 우리나라의 점수는 <표6>과 같다. 1점에 가까울수록 부패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부 부패와 경찰 및 군 부패는 128개 국가 중 각각 22위와 15위로 상대적으로 부패가 적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법부 부패는 52위, 입법부 부패는 65위로 상대적으로 심각하다. 사법부 부패는 양승태 대법원 국정농단 사건의 영향이 설문 응답자와 전문가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점수는 0.70으로 행정부 부패와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입법부 부패는 0.32로 절대적인 점수도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다. 즉, 설문 응답자와 전문가의 인식에서 우리나라는 권력형 부패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6> 부패 부재 지수

하위지표	점수(1점 만점)	순위
행정부 부패 Government officials in the executive branch do not use public office for private gain	0.67	22/128
사법부 부패 Government officials in the judicial branch do not use public office for private gain	0.70	52/128
경찰 및 군 부패 Government officials in the police and the military do not use public office for private gain	0.88	15/128
입법부 부패 Government officials in the legislative branch do not use public office for private gain	0.32	65/128

* 출처: World Justice Project (2020)

세계경제포럼에서는 2004년부터 국제경쟁력지수를 발표하고 있는데, 회원에게만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지수를 확인하였다. 2018년에 대대적으로 측정지표 수정을 하여 현재는 기업윤리에 관련한 상세 지표가 부족하다. 또한, 하위 지표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분석 보고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부패 관련 지표는 매년 발표하지는 않는다. 자료 접근성의 한계 등으로 인해 본고에서는 민간부패와 관련하여 2012년, 2013년, 2016년, 2017년 순위와 2017년 점수를 분석하였다. 민간부패 관련 국제경쟁력지수의 우리나라 순위와 점수는 <표7>에 나와 있다. 2017년에는 7점 만점 기준으로 대부분의 지수가 3점에서 4점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등수를 보면

상당한 편차를 보인다. 공공부문 부패와 연결되어 있는 기업의 뇌물공여는 137개국 중에 45위로 다른 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하지만 기업의 윤리행태는 90위, 기업이사회 효능 수준은 109위, 소액주주 이익보호는 99위로 민간부패와 관련한 지수는 공공부패와 비교해볼 때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순위 변동을 보면, 2012년에 비해 기업의 뇌물공여, 재무감사 및 보고기준 수준, 기업이사회 효능 수준, 소액주주 이익 보호는 조금이나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기업의 윤리행태는 56위에서 90위로 하락하여 상당히 악화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민간 부패가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하겠다.

〈표 7〉 국제 경쟁력 지수 순위 및 점수

하위지표	2012 순위	2013 순위	2014 순위	2016 순위	2017 순위	2017 점수
기업의 뇌물공여 Irregular payments and bribes	50	57	52	52	45	4.7
기업의 윤리행태 Ethical behavior of firms	56	79	95	98	90	3.5
재무감사 및 보고기준 수준 Strength of auditing and reporting standards	75	91	84	62	63	4.7
기업이사회 효능 수준 Efficacy of corporate boards	121	130	126	109	109	4.3
소액주주 이익 보호 Protec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interests	109	124	119	97	99	3.7

* 출처: World Economic Forum (2018),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8, 2015, 2014)에서 재인용

V. 결론: 우리나라의 부패방지 정책 방향

국제기구는 거대부패에 대한 국제적 공조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 부패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시도한바, 공공부문의 생계형 부패는 많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거대부패를 차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거대부패는 반부패 선진국에서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문제이다(Kaufmann, 2004). 거대부패는 정부 신뢰에 대한 심각한 위협요인이기도 하며 부패방지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정당성을 훼손시키기도 한다(Miller & Spence, 2005). 우리나라의 정부 신뢰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문제도 거대부패 문제와 연관되었을 수 있다.

거대부패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생계형 부패는 제도 정비를 통해 어

는 정도 억제할 수 있으나, 거대부패는 기대수익이 기대비용보다 월등히 크기 때문에 통제하기 어렵다(Ferrali, 2017). 부패수준이 달라지면, 부패유형과 요인도 달라지므로 정책도 변화해야 한다(Billger & Goel, 2009). 거대부패와 생계형 부패의 특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표8>과 같다. 이러한 차이점을 염두하고 거대부패를 겨냥하는 부패방지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최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거대부패의 복잡성과 낮은 적발가능성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판단한다. 이러한 거대부패를 억제할 수 있는 부패방지정책들이 도입되려는 시도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한다.

〈표 8〉 거대부패와 생계형 부패

특성	거대부패	생계형 부패
부패행위자(Holmes, 2015)	엘리트	하위직 관료
복잡성(Lamsdorff, 2005)	복잡함 (입법 로비 등)	단순함 (위법행위)
적발가능성(Pechlivanos, 2004)	낮음	높음
동기(Fabre, 1996)	부와 권력 강화	생계 및 부의 축적
부패의 악영향(Rose-Ackerman, 2013)	상대적으로 강함	상대적으로 약함
다른 부패에 대한 악영향(Riley, 1999)	생계형 부패 조장	거대부패를 조장하지는 않음

국제사회는 글로벌 아젠다로 민간부패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민간부패의 통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민간부패 중 공익침해행위만을 「공익신고자보호법」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어 민간부패에 대한 대응 노력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고 할 수 있다.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민간부패가 공공부패보다 더 많이 발생하고 파급력도 커지게 된다. 한국 사회의 민간부패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공유되고 이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응이 강화되어야 한다.

국제기구는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거대부패와 민간부패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부패방지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부패 관련 지수 분석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도 거대부패와 민간부패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과거 복무 점검 및 근무기강 중심의 생계형 부패 통제 전략에서 벗어나 거대부패에 대한 다양한 통제 방안에 대해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부패방지가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중요한 이슈라는 인식도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국민권익위원회 (2008). 유엔 반부패 협약(영한대조본)
- 김상욱 (2009). 전자정부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행정정보 공유방안. 『산업과 경영』, 21(2):59-79.
- 김은경 & 강수돌. (2015). 기업, 정부, NGO 구성원의 지속가능발전 인식 차이에 대한 탐색적 연구. 『경상논집』, 35(1), 29-54.
- 신전권 (2010). 정부부문의 지속가능성보고서의 평가와 개선방안. 『지방정부연구』, 14(1): 225-248.
- 오수길 (2016).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분석. 『한국비교정부학회보』, 20(2): 181-199.
- 오수길 · 한순금 (2018).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분석. 『한국비교정부학회보』, 20(2): 181-199.
- 우명동 (2011). 지속가능지역경제발전과 정부 간 재정관계. 『재정정책논집』, 13(4): 111-151.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19).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보고서 2019.
- 지옥정(2019). 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 조망한 누리과정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탐색적 고찰. 『유아교육연구』, 39(2): 213-233.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8). 세계경제포럼(WEF)의 세계경쟁력보고서 2017-2018 분석.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5). 세계경제포럼(WEF)의 세계경쟁력보고서 2014-2015 분석.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4). 세계경제포럼(WEF)의 세계경쟁력보고서 2013-2014 분석.
- Billger, S. M., & Goel, R. K. (2009). Do existing corruption levels matter in controlling corruption?: Cross-country quantile regression estimates.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90(2), 299-305.
- Brademas, J., & Heimann, F. (1998). Tackling international corruption: no longer taboo. *Foreign affairs*, 17-22.
- Coppedge, Michael, John Gerring, Carl Henrik Knutsen, Staffan I. Lindberg, Jan Teorell, David Altman, Michael Bernhard, M. Steven Fish, Adam Glynn, Allen Hicken, Anna Lüthmann, Kyle L. Marquardt, Kelly McMann, Pamela Paxton, Daniel Penstein, Brigitte Seim, Rachel Sigman, Svend-Erik Skaaning, Jeffrey Staton, Agnes Cornell, Lisa Gastaldi, Haakon Gjerløw, Valeriya Mechkova, Johannes von Römer, Aksel Sundtröm, Eitan Tzelgov, Luca Uberti, Yi-ting Wang, Tore Wig, and Daniel Ziblatt. (2020). "V-Dem Codebook v10" Varieties of Democracy (V-Dem) Project.
- Emas, R. (2015).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definition and defining principles. Brief for GSDR.
- ERCAS (2020). Index of Public Integrity, (<https://integrity-index.org/data-download/>). (Retrieved 2020. 12. 15)
- Fabre, R. G. (1996). Las estructuras culturales de la corrupción en Venezuela. In *Eficiencia, corrupción y crecimiento con equidad* (pp. 49-68). Universidad de Deusto; Deustuko Unibertsitatea.
- Ferrali, R. (2017). Partners in crime? Corruption as a criminal network.
- Holmes, L. (2015). *Corruption: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Kaufmann, D. (2004). Corruption, governance and security: Challenges for the rich countries and the world.
- Kenny, C. (2009). Measuring corruption in infrastructure: Evidence from transition and developing countries. *The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45(3), 314-332.
- Lambsdorff, J. (2005). Between Two Evils-Investors Prefer Grand Corruption! University of Passau.
- Lopez-Claros, A. (2014, January 24). Why is Corruption Today Less of a Taboo than a Quarter Century Ago? (<http://blogs.worldbank.org/futuredevelopment/why-corruption-today-less-taboo-quarter-century-ago>.) (Retrieved 2015. 11. 14)
- Mackey, T. K., Vian, T., & Kohler, J. (2018).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s a framework to combat health-sector corruption. *Bulleti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96(9), 634.
- Miller, S., Roberts, P., & Spence, E. (2005). Corruption and anti-corruption: an applied philosophical approach. Prentice Hall.
- Mugellini, G., & Villeneuve, J. P. (2019). Monitoring the Risk of Corruption at International Level: The Case of the 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European Journal of Risk Regulation*, 10(1), 201-207.
- Mungiu-Pippidi, A., & Dadašov, R. (2016). Measuring control of corruption by a new index of public integrity. *European Journal on Criminal Policy and Research*, 22(3), 415-438.
- Olken, B. A., & Pande, R. (2012). Corruption in developing countries. *Annu. Rev. Econ.*, 4(1), 479-509.
- Pechlivanos, L. (2004). Self-enforcing corruption: Information transmission and organizational response.
- Riley, S. P. (1999). Petty corruption and development. *Development in Practice*, 9(1-2), 189 - 193.
- Rose-Ackerman, S. (2013). Corruption: A study in political economy. Academic Press.
- Smith, J., Pieth, M., & Jorge, G. (2007). The recovery of stolen assets: A fundamental principle of the 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U4 Brief.
- Transparency International. (2019).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https://www.transparency.org/en/cpi/2019/results>).(Retrieved 2019. 10. 24.)
- United Nations (2020). The 17 Goals, (<https://www.sdg.un.org>).(Retrieved 2020. 12. 7.)
-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1987). Report of 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Our common future. Oslo, Norway: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Environment.
-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2020). The Ten Principles, (<https://www.unglobalcompact.org>).(Retrieved 2020. 12. 7.)
- V-Dem Institute (2020). V-Dem Dataset-Version 10, (<https://www.v-dem.net/en/data/data/v-dem-dataset/>). (Retrieved 2020. 12. 1.)
- World Economic Forum (2018).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8.
- World Justice Project. (2020). The World justice project: rule of law index 2016. Washington,

D.C.: The World Justice Project.

투고일자 : 2020. 12. 08

수정일자 : 2020. 12. 16

게재일자 : 2020. 12. 31

<국문초록>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의 부패방지정책 방향이 우리나라의
부패방지정책에 주는 시사점

민 경 선

국제연합(United Nations)은 2016년부터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세워 추진하고 있다.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16번인 평화, 정의, 강한 제도 구축(Peace and Justice Strong Institutions)은 부패방지와 연결되어 있으며,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과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는 지속가능발전목표 16번과 연계하여 부패방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관한 국내외 다양한 문헌들이 있음에도, 지속가능발전목표와 부패방지를 연계하여 연구한 논문은 찾아보기 어렵다.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의 부패방지정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우리나라의 부패방지정책에 대한 시사점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고는 UN 관계자의 인터뷰 및 문헌 연구를 통해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의 부패방지정책의 방향을 이해하고 이러한 정책 방향이 우리나라의 부패방지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분석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를 구성하는 하위지수 분석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부패수준에 대한 진단을 추가하였다.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은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의 이행 점검과 함께 자산회복에 중점을 두면서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urt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는 민간부문에서의 부패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정부, 민간, 시민사회 등이 함께하는 Action Platform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은 글로벌 차원의 거대부패와 민간부패에 대한 제재를 전략목표로 삼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관한 부패인식지수의 하위지수를 분석해보면, 정치와 기업의 영역에서 부패인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부패방지정책은 주로 생계형 부패와 공직기강 측면에서 추진되어 왔다. 민간부패와 거대부패에 대한 통제로 정책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주제어: 거대부패, 민간부패, 부패방지, 부패인식지수, 지속가능발전목표

